

POLICY TREND

정책동향

산업용전기로 작년수준서 동결

정부-재계 합동의 '제1차 기업투자어로해결 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려 그동안 노사·세제·금융·규제 분야에서 건의돼 온 20여개의 애로 중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수출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과 가동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당초 2.5% 인상키로 했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서비스업에 적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발전회사의 경영개선에 의한 이익을 반영해 인하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설비·재활용설비·청정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자부의 환경설비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5.5%에서 4.9%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인력지원대책을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서비스업·문화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자부장관을 비롯한 경제5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기 정책자금 2조4천억원 확정

2004년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규모가 2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제4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200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2003년도 2

조5천억원과 비슷한 2조4천억원으로 심의·확정했다.

또 신용보증 공급 규모도 작년과 동일한 40조원 수준을 유지기로 했다.

정책자금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3천2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창업자금을 개별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전체 지원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즉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기업평가 방식을 현재 자금별 점수제에서 국제기준에 따른 기업별 신용등급제로 전환, 일정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에서 신용 위주의 직접 대출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업체에 대해서는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키로 했다.

현재 신한·한미·외환·제주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보증업무 전자화는 2004년 상반기에 전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진공, LA 수출인큐베이터 개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서부시장 진출과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18일 미국 LA에 수출인큐베이터를 개소했다.

중진공은 이에 따라 미국 LA와 시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베이징(北京) 및 광저우(廣州) 등 전 세계 무역거점 5곳에 수출인큐베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문을 연 LA 수출인큐베이터에는 컴아트시스템 등 18개 중소기업이 입주했다.

이들 기업은 중진공으로부터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책걸상 등 비품 제공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및 컨설팅 실시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지바이어와의 통역지원 ▲수출인큐베이터 파견직원의 조기 현지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중진공은 지난 11월 현재 미국 시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베이징 등 3개 인큐베이터를 통해 852억원의 수출성적을 거뒀다.

지난 98년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 개소 이래 총 수출실적은 3천732억원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에서 탈피, 직수출로 수출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소비자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남아 수출거점인 베트남과 중남미 수출거점인 브라질 등 2개 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와 관련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참조하거나 수출지원팀(02-769-6952/4) 또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개성공단 오는 2~3월 착공

“北측, 세관·출입·체류·거주 규정 채택”

통일부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과 세관 및 출입·체류·거주의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에 3개 규정이 채택됨에 따라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이미 채택된 개발, 기업창

설운영, 세금, 노동규정과 함께 개성공단 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이번에 채택된 3개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의 시행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로 절차적인 것을 기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하나씩 채택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 때부터 우리측이 지문을 해주었으며, 이번 규정도 북측이 개발업자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나왔다”며 “초대 이사장도 개발업자가 임명토록 규정했지만 개발업자 추천 인원으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 차기 이사장도 우리에게 맞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조만간 외환, 부동산, 광고 규정이 추가로 채택되고 통행합의서와 토지임대료 협상 등 남북 양측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2~3월께 개성공단 건설공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외환 등 나머지 3개 규정과 통행합의서 등에 대한 합의 등 나머지 제도적 장치가 마무리되어야 북측과 개발사업자간 사업계약 체결과 통일부의 협력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삽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성공단 세관규정 내용과 의미 〉

북측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세관 규정은 물자의 이동을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한 점이 골자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자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간소화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개성공단이 남측 공단과 큰 차이없는 자율성을 갖게 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북측은 반출입 금지 품목으로 무기류와 무전기, 독약, 마약, 방사성물질 등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과는 무관하다.

외화를 금액에 상관없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반출입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북측의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는 외국 여행시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북측은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해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주 오가는 운송 수단은 세관에 등록, 별도의 수속을 밟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세관검사는 도착지와 출발지에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조 확인한다’고 정해 표본검사도 가능하게 했으며 휴대폰은 기계로 검사 또는 생략할 수도 있게 했다.

이는 현재 남측의 금강산 관광객이 사전에 일일이 휴대폰 목록을 작성해 북측에 제출하고 세관에서도 짐을 수작업으로 조사하는 등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북한이 이번에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과 세관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등을 발표하면서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발표한 하위규정은 개발과 기업창설, 노동, 세무를 포함해 모두 7개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측은 연내에 외환과 광고 규정을 추가로 채택하고 내년 초에 부동산과 회계 등 나머지 규정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세관 규정이 기대 이상으로 남측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다”며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물자 반출입 신고제와 세관 신고없이 외화를 반출입할 수 있게 한 세관 규정 등은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북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在中한국기업 경영지원 박차

“대한상의, 韓·中 양국간 지원협력 요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경영지원에 본격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지난12일 중국한국상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재중한국기업경영지원교류회'를 통해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애로를 중국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2002년 5월 제1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국 내 한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류회에는 산자부, 중국 상무부,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 및 중국한국상회 32개 지역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재중한국기업의 경영현황과 중국 투자진출시 주의할 점 등을 상호 교류했다.

교류회에는 특히 우리 기업의 대중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상무부와 세무총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무, 관세 및 외자기업 설립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애로를 직접 들음으로써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영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규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개막식에서 재중 한국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현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또 올해도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창출되고 있는데다 이러한 대중국 역흑자가 상당 부분 재중 한국기업의 국내 원부자재 조달에서 기인하고 있어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이와 함께 재중 한국기업과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조가 양국간 경제협력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측 투자기업 활동에 대한 양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중국한국상회를 대표하는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박봉규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중국측에서 완지페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및 중국주재 17개국 외국상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해외시장 개척요원 대폭 늘려

“중기청, 금년 남미 등에 700명 파견”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요원이 대폭 늘어난다.

중기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이 미미한 브라질 등 63개국 시장을 개척할 해외시장 개척요원 700명을 금년 중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파견된 110명보다 6.4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개척요원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종전 중소기업 임직원에서 미취업자로 확대, 청년 실업해소와 연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올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파견된 KS인터내셔널의 최명환씨가 모바일폰 1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사업확대를 결정했다” 말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요원은 외국어가 능통한 미취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로 6주 동안 무역실무 합숙훈련을 거친 뒤 남미 동유럽 북아프리카 중미 중앙아시아 중국 등에 파견된다.

중기청은 특히 중국어나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특수지역 언어능통자와 이공계 대학 출신자, 대학생 중소기업현장활동(중활) 1개월 이상 참여자 등을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교육을 마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과 수출인큐베이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4개월간 파견돼 현지 시장 개척활동을 벌이게 된다.

개척요원에게는 국내 교육비와 왕복항공료 전액을 제공하고 현지에서의 활동비도 월 100여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12개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기술부문에 10조6천억 지원

“산자부, 차세대 성장동력 5개년계획 공청회”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비는 약 15조6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기술개발에 6조7천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약 4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전략적 기술개발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및 주력기간산업분야 20대 기획단에서 발굴한 200대 기술개발과제에 총 2조원을 투자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안에 모든 과제를 조기 착수키로 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각 과제는 5년 내외에 1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신기술 사업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을 앞으로 5년간 300개 정도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의 사업체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대책으로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발주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개발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 2004년 시범 추진한 후 2005년부터 본격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중갑 산자부 차관보를 비롯해 한민구 서울대 공대학장, 배철한 삼성SDI부사장,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윤대희 연세대 공대학장, 김춘호 전자부품연구원장, 신미난 퓨얼셀퍼워대표 이사,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 지정토론자 7명과 차세대 성장동력 20개 추진단 위원 등 국내 산업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